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이승환 선임비서관 (이응우 국회의원실)	연락처	010-8784-1878 (lywchosim@naver.com)
----	--------------------------	-----	--

'제2의 양회동 열사 막자' 민주당, 건설산업연맹과 노동자 살리기 정책협약

- 민주당 선대위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협약식
- 5월 27일(화)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건설불경기 극복과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다짐
- 건설투자 확대, 건설노동자 일자리 확충,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방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과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와 노동본부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건설산업연맹과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건설산업연맹 임원진을 비롯해 산하노조인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건설기업노조) 임원진이 총출동하여 건설 불경기, 임금체불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지를 모았다.

정책협약서에는 ▲건설투자 확대 ▲건설노동자 일자리 충실 ▲불법하도급 근절 ▲임금착취 및 체불 근절 등 건설업계의 핵심 현안들이 담겼다.

특히 현재 불경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에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과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관행의 근절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짓밟혔던 노동현장을 다시 복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협약식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승호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근로자 정의 확대와 노동기본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노동자 권리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건설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정부 주도산업인데 윤석열 정부 3년간 무너져내렸다”며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미명하에 노동탄압을 자행했다”며 “양회동 열사의 분신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에서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건설노동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며 “건설경기가 살아야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본부장도 “특수고용, 불법다단계, 임금체불, 이주노동자 문제 등이 노동현장의 핵심 쟁점”이라며 “임금체불로 인한 소비 감소는 내수경기를 직접 타격하는 민생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용우 노동본부 부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의 시작이 바로 양회동 열사 사건”이라며 “노동탄압에 건설경기 불황과 임금체불까지 겹쳐 건설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새 정부에서 협약내용 의미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정책협약서]

[붙임 2. 협약식 현장사진]

21대 대선 정책 협약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건설산업과 건설노동자의 심각한 위기 극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1.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등 건설투자 확대를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하여, 내국인 건설노동자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석유화학플랜트(여수, 울산, 대산공단)의 장기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랜트건설업의 위기 극복과 플랜트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
3. 건설현장 다단계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공사비, 적정 공사기간 확보, 건설노동자의 임금착취와 체불근절,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 투명화 등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 위와 같은 정책을 논의하고 노사가 공존하는 공정한 건설현장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 및 건설산업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건설산업과 건설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한다.

2025. 5. 27.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영 철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진 성 준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본부장 김 주 영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본부장 김 영 훈

